

출력업체 대표들

“밤새 안녕하셨습니다까”

때아닌 소프트웨어 단속, 때아닌 ‘상시단속’으로 변경

지난 7월 중순부터 충무로 일대 출력업체들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 Korea Software Proprety-right Council)직원들을 위시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의 출현으로 인해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정회사 출력기를 취급하는 Y사가 출력기를 판매함에 있어 폰트를 불법으로 복제해 ‘서비스(?)’로 끼워서 판매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Y사 관계자는 지난 10월에도 SPC에 의해 수사 의뢰되어 해당 지방 경찰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로 인해 Y사 관계자는 8월 중순에 두번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Y사로부터 출력기를 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폰트를 인계 받은 10~20여 개 출력업체 관계자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폰트를 판매한 Y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된 폰트임을 알고서도 폰트를 인수해간 출력업체 관계자들도 좀더 저렴한 패키지 상품이 아닌 정품 폰트 구입은 물론 SPC측에 합의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지 않은 경제여건과 여름철 비수기에 들이닥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 업계로서는 무어라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충무로 일대 출력업체 관계자는 “우리아 뭐 공짜로 준다고 하니깐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불경기에 영업도 잘 안 되는데 단속반까지 들이닥쳐 봐요. 그럼 더 짜증나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정상적인 폰트 구입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Y사 관계자의 욕심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업체까지 발생하고 있다.

J출력업체는 S회사의 출력기를 들여놓는 과정에서 정품 폰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올 봄 새로이 대형 출력기로 교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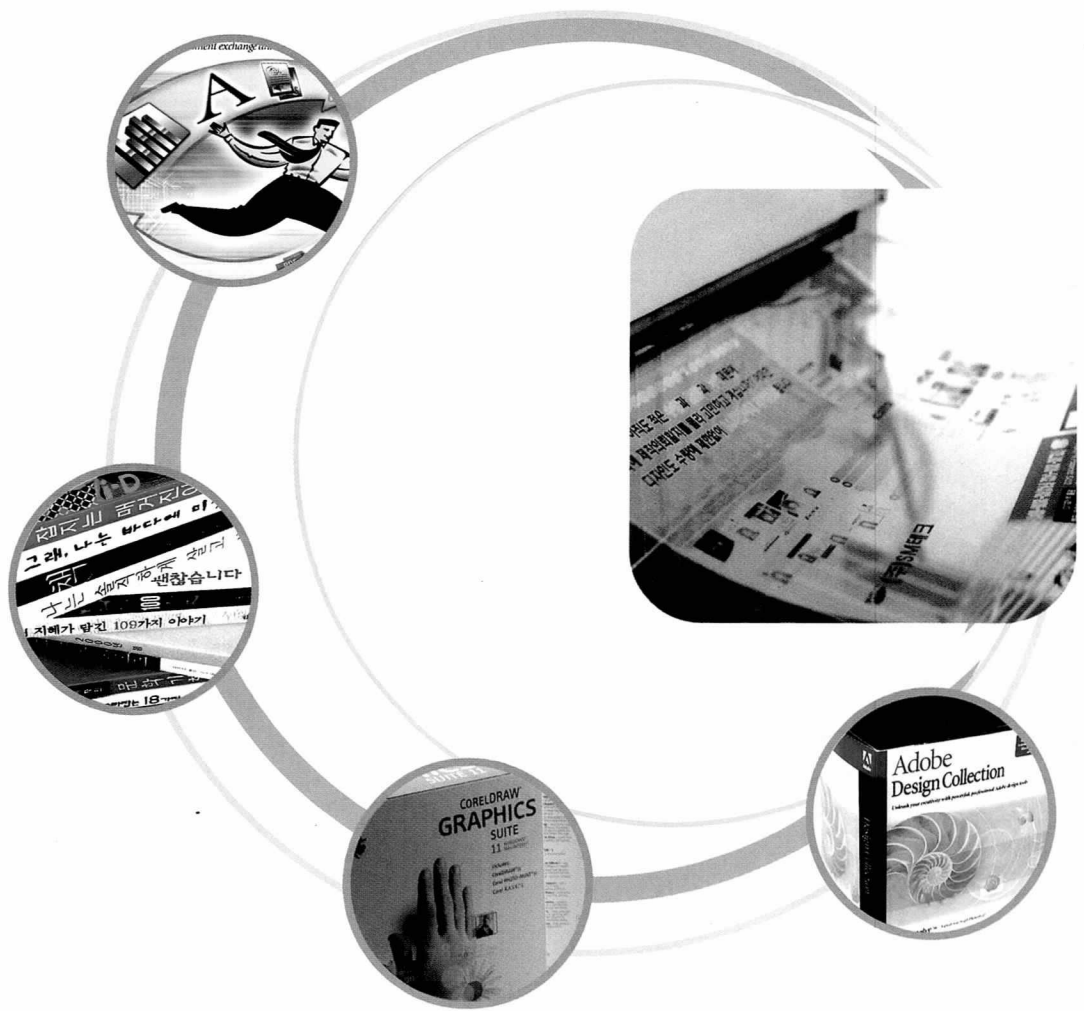
과정에서 J출력업체 관계자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J사 관계자는 출력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들여놓는 출력기에 기존 출력기에서 쓰던 폰트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Y사 관계자가 기존 출력기에 있던 정품 폰트는 그대로 가져가고 새로 납품한 출력기에 불법 복제된 폰트를 납품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던 J출력업체 관계자는 불법 복제 단속반이 출력업체를 방문, 복제된 폰트를 발견할 때까지 불법 폰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단속을 당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을 당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략 100여개 출력 업체가 조사 대상에 올라 있어서 충무로와 성수동, 구로동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향후 출력업체 전체의 경기 위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출력업체의 불멘 소리와 상관없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SPC의 대응은 완강하다.

“인쇄업종은 우리나라 평균 불법 복제율 40%를 훨씬 웃도는 업종이다. 이번 단속이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난 5월부터 꾸준히 있어온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며, 앞으로도 폰트뿐만 아니라 매킨토시 제품에 사용



되는 각종 불법 프로그램에도 단속은 계속된다"라고 말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단속 강화의 조짐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지난 6월30일에는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 올 10월부터 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 30여명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을 갖게 된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관한 사법권이 정보통신부 산하 공무원에게까지 주어짐에 따라 단속의 강도가 더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이들에게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해 나갈 경우 단속 대상 업체 등에 협조를 구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했다.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업체로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정통부 산하 공무원에게 사법권한이 주어지면 검·경을 동행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단속 대상업체에 협조가 아닌 조사를 곧바로 행할 수 있게 되며, 상시 단속까지 가능해 진다.

SPC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복제 단속은 전국에 있는 30여명 정도의 체신청 지역단속반이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체신청 단속반이 사법경찰권을 갖게되면 무조건 단속을 거부하면 된다는 풍

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9월에 열린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재 협상도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미 무역대표부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지식정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미 지난 5월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 상시 단속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출력업체 관계자는 "출력비 하락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즉, 불법 소프트웨어 특히 비용 규모가 큰 폰트의 경우 불법으로 복제를 한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불법 폰트를 넘겨받은 업체가 불법 폰트를 인계한 만큼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폰트 구입 비용에서 남긴 이익만큼 저렴하게 출력 단가를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을 불러 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 서체개발회사 관계자는 "옛날에 비해 패키지 상품도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서체 가격이 많이 저렴해 졌다"며 "모든 출력회사와 서체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